



한국사료산업의 발전방향

김 치 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과장

I. 국내외 축산환경의 변화

결프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또다시 국내외의 관심은 UR 협상테이블로 모아지고 있다. 결프전쟁을 통해서 세계 정치·경제의 리더십을 재확인한 미국은 이제 더욱 자신만만하게 UR 협상에서 강자의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휴전(?)상태에 놓여 있는 UR 협상테이블에 NTC(Now-Trade Concerns : 비교역적 기능품목)품목의 선정을 통해 조건부 타결안을 제시했던 한국과 일본, EC 등의 입장은 미국의 무조건적 수락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향후 미국은 무역보복 등의 응단폭격으로 대처한다는 강경입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공공연하게 쌀의 제한 대부분의 NTC 품목을 철수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외 언론 또한 더욱 거세질 미국의 압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분위기를 볼 때 향후 5~6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개방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정부의 시기적절한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축산기반은 과거 밀농사, 면화농사가 그러했듯이 점차 우리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축산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축산 및 사료산업의 성장은 이제 기대할 수 없다. 축산물 수입개방은 국내 사료산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지난 86년 19%, 87년 17.5%를 기록했던 배합사료 생산증가율이 쇠고기 및 돼지고기 통조림이 본격화되던 88년에는 8%, 89년에는 6.5%, 지난 90년에는 0.2%의 성장으로 가까스로 전년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이같은 성장의 둔화추세는 과거 4~5년 주기로 나타났던 일시적 조정국면과는 성격이 다르다.

축산불황과 축산을 소비증가 둔화로 가뜩이나 위축된 상태에서 수입개방에 떠밀려 벼랑에선 한국축산이 저성장시대로 들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수년전부터 축산물 수입개방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수입쿼터제를 채택하고 있고 최근 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목전의 일로 다가오자 여러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화우육에 대한 품질차별화시책으로 사육기술을 개선함으로써 불리한 가격대신 질로서 수입쇠고기에 대해 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품질차별화시책의 결과 일본내에서는 값비싼 화우육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성공하였고, 일부 화우육을 미국에 수출까지 시도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일본의 양축농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아울러 일본정부에서는 가축다투사육시책을 펴며, 가축을 다수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사일로시설 및 진입도로, 통신 등 하부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II. 적극적인 대응의 시기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농축수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수입품목의 차액보상, 작목전환용자,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상적 차원의 지원만 가지고는 외국의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외국의 축산물 생산여건과 동일한 여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최종산물이라 할 수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통조림 등은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배합사료나 축산기자재, 원료사용 등에 대한 불리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

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일본, 대만 등 완료수입국들이 사료원료에 대해서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료원료에 대해 3~15%까지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가 사료용원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료용 대맥마저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비료, 농약 등 경종농업용 생산자재에 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확대시켰으면서도 사료는 제외시킴에 따라 축산물 생산비의 40~50%를 차지하는 배합사료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가며 정부지원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배합사료공장 허가제의 등록제도의 전환문제도 보다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작정 공장신축 허가가 자율화되면 공장이 늘어나고 사료가격도 낮아지리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원래 배합사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료공장은 2교대(16시간)의 가동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설의 과잉공급에 따른 cost-up(원가인상)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도 사료공장이 신고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료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기존공장 1개를 매입하여 없애야만이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세 옥수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사료산업의 완전개방이 배합사료 원가절감의 첩경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현재 축협 및 일반사료공장 80여 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여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농가자가사료 생산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일부 배합사료공장의 혼합사료공장으로서의 전환 등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일부에서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농가 자가사료 생산과 배합사료공장허가제 전환은 별개의 사안으로 농가자가사료는 이미 일부 농가에서 정착단계에 있고, 정부나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양축농민에게 보다 밝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사료원료 수입규제의 해제와 관세인하 및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실현하여 개방정책에서 소외된 양축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축산업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단합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UR 협상에 대한 양축농가의 입장도 양축가 개개인이 대표할 수 없고, 마냥 정부의 입장만을 지켜볼 수만은 없듯이, 양축농가나 관련산업에 대한 입장은 관련업계의 입장을 대신하는 협회나 조합 등을 통해 대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협회, 또는 조합 등에 대해 소속집단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대신 각자의 권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축산장래를 걱정하면서도 그동안 우리 양축농가들이 각자의 의무보다도 권리만을 주장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를 반성하고, 양계인은 양계협회를, 양돈인은 양돈협회를, 낙농육우인은 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찾아가려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과 시기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축산업은 소도 잃고, 외양간마저 잃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걸프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사료곡물가격이 크게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많은 물량의 사료용

“

현재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축산업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단합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UR 협상에 대한 양축농가의 입장도 양축가 개개인이 대표할 수 없고, 마냥 정부의 입장만을 지켜볼 수만은 없듯이, 양축농가나 관련산업에 대한 입장은 관련업계의 입장을 대신하는 협회나 조합 등을 통해 대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협회, 또는 조합

등에 대한 소속집단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대신 각자의 권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소맥이 조기구매됨으로써 사료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수년동안 우리나라 배합사료와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두박이 수입자유화되고, 방위세 등이 철폐되면서 걸프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축산 및 사료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날이 개였을 때 지붕을 고치라는 속담이 있듯이 금년과 같이 배합사료 가격이 안정될 때 일수록 양축농가들도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의 배합사료 가격 상승 등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나, 둘 그동안 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온 제도가 개선되어 나감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인위적인 배합사료 가격 인하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정부보다는 사료공장과 양축농가차원에서 원가절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응하여 사료는 사료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각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